

35개 분야 '사회적 일자리' 12만 5천개 창출

노동부 보고

◇일자리 창출 어떻게=내년 상반기 고용위기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하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계획'을 통해 내년 6월 정부 차원에서 모두 12만5천여개(35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노동부는 지역개발, 환경, 문화 등 앞으로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분야에서 모두 1만5천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로 1천8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이란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의 각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정부가 인건비를 해당 사업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자리 창출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실업자가 현재(75만명)보다 13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한국고용정보원 전망에 따른 것이다. 또 산업단지에 입주하거나 취업포털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인력부족 현상을 파악한 뒤 '빈 일자리 기업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직자와 저소득층 구직자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일자리 '매칭 사업'도 추진한다.

외국인 대신 내국인 고용맨 1인당 120만원 지원

비정규직법 개정·복수노조 인정 방안 추진

■노동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주요 과제	세부 내용
고용안정대책	- 고용유지지원금 금액·지원기간 확대 - '빈 일자리 DB' 구축 (중소기업에 실직자 재취업 유도) - 방문취업제 규모 제한, 건설업 채용 쿼터제로 국내 인력 일자리 확충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취업예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시행으로 청년실업 해소 - 실업급여 확대 (개별연장급여 수급 요건 완화, 영세자영업자 가입 허용) - 저소득층 취업지원 패키지사업 (저소득층 미취업자 취업시 성공 수당 100만원 지급)
고용안정 예비계획 (실업자 100만명 근접시)	- 고용 어려운 특정 업종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확대 - 실업자 직업훈련(3만명)·사회적 일자리(4만명) 확대 -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2개월) 지급 - 채용근로자, 실직가정 대부사업 지원 증액 - 기업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한다 확대
고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선진화	-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제한기간 연장 (현행 2년, 기간제한 적용 예외 확대) - 근로기준법 유연화 방안 추진 -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체계 구축, 노조 전임자 급여금지 제도 개선
노사갈등 해결 시스템 정비	- 자동차·공공·금융·보건·건설 5대 부문에서 노사관계 취약업종 민·관 합동 TF 운영 - 협상사업장 15개소, 노사분규 취약사업장 350개소 중점관리 - 1년 단위 노사교섭 2년 연장 지도 - 지역 노·사·민 협의체 강화

실업자 일자리 마련을 위해 정부는 재외동포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을 제한하고 내국인 대체를 장려하기로 해 논란도 예상된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재외동포의 건설업 및 서비스업 방문취업제 규모를 제한하고 건설업에서는 채용 할당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외국인을 국내 인력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에는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실업 해소 목적으로 폴리텍대학에 '웹기반 기계제어'와 같은 유망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등을 통한 고용 촉진 사업도 시행한다.

구조조정을 당할 위험에 처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정관계 실업유판=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정을 비롯한 노동 분야 쟁점 현안들을 내년의 주요 업무 과제로 확정해 노정(勞政)간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제한기간 연장과 복수노조 인정은 노정 간의 견해차가 뚜렷한 현안이어서 정부가 계획대로 입법을 강행할 경우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근로기준법 관련법 개정, 복수노조 인정 및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방안을 내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로 꼽았다. 노동부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연장하고 기간제한 적용 예외를 확대하며 파견 허용업종도 현행 32개 업종에서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사용제한기간 만료를 앞두고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초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조기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유영복 보건복지가족부차관, 김양 국가보훈처장, 이영희 노동부차관, 변도윤 여성부차관, 정중수 노동부차관, 김태성 여성부 기획조정실장,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연합뉴스

전국 50곳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아동·여성 보호 지역조직 전국 시·군·구 확대

여성부 보고

◇여성 일자리 확대=여성부는 경력이 중단된 중장년 여성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종합 대책으로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를 수립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 중심기관인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는 내년 1월 중 50곳을 지정하고, 2012까지 100곳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새일센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회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해 곧바로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며, 노동공=휴업 또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와 실직한 임시일용직 가구 중 최소한 가족 구성원 1명은 일자리를 갖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 숫자를 올해보다 2천 개 많은 7만2천 개로 늘린다. 특히 신규 발생·조정되는 사회 서비스 직업 1만4천250개가 저소득 무직 가구의 여성에 제공된다.

나가기로 했다. 여성부는 새일센터와 새일본부에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사 350명을 배치하고, 이를 통해 10만여명이 상담이나 직업교육을 받고 3만7천여명이 취업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여대생케어이개발센터' 운영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지원도 현재 12개 대학에서 내년에는 20개 대학으로 늘리고, 젊은 여성을 위한 지역 특화직종, 고학력 여성을 위한 유망 전문직종, 국제 인력 개발을 위한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아동·여성 안전하게=총리실 부 및 지자체와 협력해 총 143억의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돼 단지 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면서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새일본부)'는 현재 광주, 익산, 시화, 창원, 오창 등 5곳에서 전국 35개 산업단지로 확대해

늘리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피해를 위한 윈스톱 지원센터도 현재 16곳에서 2곳을 추가로 설치해 전국 16개 시도에서 1-2곳이 구축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또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 강사도 올해 55명에서 내년에는 400명까지 육성해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학교에 근무하는 담당 교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24시간 상담체계를 구축한 '사이버 상담소' 설치를 추진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도 활성화 된다.

◇생활 속 평등정책=복지와 고용, 교육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가의 주요 재정 사업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안과 작성 매뉴얼을 개발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복지부 보고

◇"위기 가정도 생계 유지하도록"=복지부는 중병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앙으로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가정을 지원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먼저 저소득층 가정의 가장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운영하던 점포를 휴업 또는 폐업할 때도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32만6천609원)를 받을 수 있는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지원 기간도 현재 4개월에서 내년 3월부터는 6개월로 늘어나고 저소득층으로 보는 재산 기준도 현재 금융재산 120만 원 이하, 총 재산 9천500만 원 이하에서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 총재산 1억3천300만 원 이하로 완

저소득층 가장 입원때도 최저 생계비 지원

보험료 1만원 이하 70만 세대 절반 깎아줘

화된다. 다만 소득 기준은 현행 최저생계비의 1.5배(199만원) 이하 수준을 유지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준도 완화해 최저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재산 보유액 상한 기준이 대도시는 현재 6천900만 원에서 8천500만 원으로, 중소도시는 6천100만 원에서 6천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돈 없어도 아편 치료받아"=건강보험 지역보험료 납부액이 월 1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 70만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절반만 내도록 했다.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입원 시 분

인부담률도 5% 포인트 인하하고 본인부담 상한액도 현재 6개월 12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절반을 깎았다. 실직 또는 퇴직 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인정해주는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직장을 다닌 것으로 보는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취약계층 발굴·지원 신속화=정부의 지원이 늦어져서 취약 가구에 큰 문제가 생기는 일을 막고자 복지 지원의 신속성을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와 시·군·구, 읍·면·동

에 '민생안정지원본부'를 신설해 긴급지원 접수시 하루 안에 현장 확인 작업을 마치고서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히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회적 일자리 취약계층 우선 제공=휴업 또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와 실직한 임시일용직 가구 중 최소한 가족 구성원 1명은 일자리를 갖도록 사회서비스 일자리 숫자를 올해보다 2천 개 많은 7만2천 개로 늘린다. 특히 신규 발생·조정되는 사회 서비스 직업 1만4천250개가 저소득 무직 가구의 여성에 제공된다.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태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스타·세기보청기

1388-8400 / 02-722-0100

1021520-9496